

# 전남지역 발생 산악사고 중 '조난' 최다

### 전남소방, 최근 4년간 1593건 중 조난 282건

### 안전시설 보강·구조대 등 안전지킴이 배치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중 조난사고가 많아 전남소방본부가 산악위험 표지판 설치와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1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남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593건으로 해마다 4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조난사고가 282건(23.3%)으로 가장 많고, 실족·추락 사고 186건(15.4%), 개인질환 118건(9.8%) 등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산악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19개 주요 등산로와 산악사고 빈발지역, 위험 예상지역에 안전시설을 보

강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고려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며 산악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악사고 인명구조 훈련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면 주요 등산로에 119구조·구급대, 의용소방대,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배치해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도 운영할 계획이다.

요구조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 119 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하고, 소방헬기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구조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산악사고 구조활동 하는 전남소방본부

특히 항공대와 특수구조대, 소방서간 동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소방헬기, 특수구조대 드론, 산악구조대 구조견, 소방서 구조대가 동시 대응·수색지원을 전개한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산악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통해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등산객들도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전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 코로나 확산 틈타 마스크 사재기한 30대 벌금형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KF94 방역 마스크 375장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남은 65장을 30일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영업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자가 '마스크를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재판장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가격 폭등·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A씨가 수사기관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마스크를 사들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폭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점매석 행위로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순천경찰, 동시 보행신호(all-red) 체계 도입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과 동시에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교통시설 점검 및 동시 보행신호(all-red) 체계 도입에 나섰다.

동시 보행신호(all-red)는 교차로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동시에 녹색 신호가 켜지고 주변의 모든 차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건널목 2개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

또한 보행신호 중에 차량 우회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 광양경찰, 농번기철 특별치안활동 추진

광양경찰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범죄를 근절하고 농기계·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경찰은 절도범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농번기철 농산물 절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81일간 취약시설 순찰활동, 농산물 적재 운반차량 선별 확인 그리고 관내 농산물 저장창고 884개소에 대한 방범시설 현장진단, CCTV 작동상태 확인 등 순찰과 수확기 농기주변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 농번기철 농기계·이륜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11월 30까지 50일간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여 주요 농기계 이동로 거점검문, 사고다발지역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은혜를 원수로' 소방대원에 발길질 40대 징역

불이 난 차량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8시32분께 광주 서구 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내부에 있던 자신을 구조한 소방대원 B씨의 배를 오른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만한 합의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곡성군 '선지급 공사비 뒤늦게 환수'... 뒷북행정

### 가림막 없이 기차마을 정비 공사...5개월만 파악

곡성군이 섬진강기차마을 정비사업 시공사가 가설방음벽(공사가림막)을 철거한 뒤 재설치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은 기차마을 정비사업 가설방음벽이 설치 뒤 철거된 사실을 파악하고 시공사 측에 공사비용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설방음벽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흙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설치돼야 하며 완료 뒤 구조물을 해체한다.

곡성군은 지난 2월부터 예산 19억여원을 들여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동화정원 기반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내년 6월까지이며 현재 관광로 포장과 불거리·출길거리 제공을 위한 소화류 화단조성, 분수대 신설, 기차마을 유원지 기반시설 개선, 우수·오수관로 추가설치, 조경수 식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먼지

와 소음 방지, 관광객 안전을 위해 1억여원을 들여 공사구간에 길이 650m, 4m 높이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곡성군은 정비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5월에 열리는 세계장미축제 개막을 위해 가설방음벽을 철거 조치 했으며 1억여원의 공사비용까지 미리 지급했다.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음에도 시공사는 가설방음벽을 재설치하지 않은 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에서야 알려졌다며 곡성군은 이날 초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세계장미축제장에 가설방음벽이 설치돼 있으면 보기에 좋지 않아 축제기간에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설방음벽을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시공사가 하지 않았다"며 "미리 지급한 공사 금액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과 정비 공사 완료 뒤 지급 예정인 공사 비용을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김민정기자



## 원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살 배기 원아 3명을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어린이집 원장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가 심한 정도에 이르는 않았다. A씨가 어린이집을 폐원했고,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이상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기록·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 2일부터 7월 13일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여아 3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밀쳐 넘어뜨리고, 책으로 입과 배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정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

